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꿈꾸며

문경란(중앙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여성전문기자)

얼마 전 동창모임에서 '삼팔선', '사오정' 얘기를 하다 한 친구의 말에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할머니' 이므로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직장 다니는 딸이나 며느리의 아이를 봐주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는 '구세주' 수준으로 대접을 받는단다. 반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먹는 할아버지는 일종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눈치밥이나 먹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시집살이 '잔혹사'를 풀어내면 책 몇 권은 너끈히 써낼 수 있다고 했다. 요즘엔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 한 둘을 키우며 겪는 '애환사'로 책 한 두 권 분량이 충분하다고 한다. 보육관련 취재를 하다 만난 한 대기업의 여자박사는 오후 6시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가 다시 저녁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다. 한 후배는 '육복

(六福)'이란 신조어를 들려줬다. 애를 봐줄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이 오복에 또 한가지의 복을 더한 육복이란단다. 육복이 없었던 그 후배는 복직을 걱정하며 결국 육아휴직을 냈다. 내 경험상 보육관련 취재를 할 때면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안전사고를 당한 뒤 죄책감에 당장 사표를 쓸까 밤 세워 고민했던 일, 언론에 보도된 부실한 급식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등등. 일하는 엄마들의 가슴에 쌓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시간가는 줄을 모를 때가 허다했다.

최근 몇 년간 공보육이란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여성이나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있게 "낳기만 하십시오. 아이는 국가

가 키워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출산 파업’이란 비장의 카드로 부실한 보육체계에 저항하려던 여성들도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 아이를 키워주겠다니! 여성들은 희망의 말을 믿으려 했다.

하지만 2006년도 보육예산을 둘러싸고 최근 몇 달 간 경제관련 부처와 여성가족부가 벌이는 힘겨운 줄다리기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나라가 아이를 키워주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의 보육비용을 일부분 전액이든 국가가 부담해 공보육 체계를 만들어보려 했다. 반면 기획예산처 등 경제관련 부처의 입장은 달랐다.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시장에도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보육료 자율화는 현재 시행 중인 보육료의 상한선을 없애고 개별 어린이집이 부모가 부담해야 할 보육비를 결정하는 제도다.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부모는 많은 보육비를 부담하고 반면 돈없는 부모는 질 낮은 서비스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경우 월 200만원 정도의 보육비를 내는 초호화 어린이집이 생겨날 수도 있다. 국가가 보육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는 없으니 경쟁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생각이다.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자유 경쟁 체제가 도입돼 있는데 보육시장만 경쟁체제를 거부하기는 사실 어려울지 모른다. 더구나 쓸 수 있는 예산은 빠듯하고 돈을 써야할 곳은 많다보면 돈주머니를

찬 사람은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혹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부모 부담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겠다는 생각은 바로 이 같은 발상과 다름없다. 보육료 자율화가 꼭 부모의 부담을 높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호주 등 보육료 자율화를 앞서 도입한 나라의 예를 보면 보육비는 최소 4~5배 정도 올라갔다고 한다. 또한 보육시장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요람에서부터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 방식의 근간에는 보육 문제란 결국 개별 가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음이 분명하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사회 전체로 볼 때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일이다. 더구나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민을 거라곤 수준 높은 인적자원 밖에 없는 나라다. 아무리 예산이 빠듯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폐지하지 않듯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이를 키우는 일에 나라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인성이나 지적 수준은 유아기에 결정되며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 집중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1.15까지 떨어지는 사태의 근간에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도 힘든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보육예산을 늘려 국공립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더 낮춰야 한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매일 동동걸음을 치는 엄마들

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성들의 출산파업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

노대통령이 정말 공보육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의지가 있다면 보다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돌봄사회’로의 이행이다.

이제까지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묵묵히 돈 한푼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병든 노인을 간호하는 등의 돌봄노동을 떠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돌봄노동의 결핍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남자 혼자 만으로는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지자 아이를 키우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됐으며, 고령화로 인해 돌봐야 할 대상은 늘어났지만 젊은 세대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돌봄사회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우선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을 당연시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일은 애정이 깃든 노동이며 즐거운 노동이다. 이는 자본주의하에서 다른 어떤 노동에서도 맛볼 수 없는 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돌봄노동은 지겹고 힘든 노동으로 전락하며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노동이 되기 십상이다.

돌봄사회로 재편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돌봄노동을 도맡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이 돌봄노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돌봄사회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다행히 최근들어 아내의 해외근무를 위해 휴직계를 낸 판사가 생겨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남성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남성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남성이 돌봄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재편이 필요하다. 일터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남성이 반드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 모델이 바뀌지 않고서는 돌봄사회는 형성되기 어렵다.

나라가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공언은 궁극적으로는 돌봄사회의 재편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고 캐치플레이스를 내걸었다. 남은 과제는 돌봄노동을 가치롭게 하고 남여가 함께 돌봄노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